국회 정상화 위한 여야 협상 진통 거듭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vs "수용 불가" 팽팽
이인영 "3당 간 '통 큰 합의' 가능성 쉽지 않아"
장기간 국회 파행 부담 커 '전격합의' 가능성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상화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정국은 다시 안갯속에 갇혀버린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이야기가 잘 됐다"고 전했다. 반면 정양석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이야기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해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중재역에 나선 이동섭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에게 최소한의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들어줘서 한국당을 협상의 틀로 불러들이는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동물국회' 오명도 썼는데 서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복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원내대표 회동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할 것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호프 회동' 당시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로키(low-key·절제된) 행보를 보였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사과 및 철회 요구 이후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와 관련 "저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협상에) 임했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과도한 요구로 장애를 조성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당 간 '통 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 속에 일방적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자신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은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적은 집권당 내 이념 강화와 선명성 투쟁"이라며 "오직 제1야당을 적대시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장기간 국회 파행에 대한 여야의 부담이 적잖은 만큼 '전격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전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끝으로 한국당이 지난 18일간 이어온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되지만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6월 역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퇴진 관련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사과 발언을 한 뒤 손 대표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손학규 사퇴론은 힘 빠졌는데 '혁신위' 구성하고 2선 후퇴?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이를 반대하는 퇴진파 사이의 알력 다툼이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혁신위 체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다시 점화될 분위기다.

당대표 퇴진에 총대를 멨던 하태경 의원이 '정신 퇴락' 발언으로 반감만 불러 일으키며 역풍을 맞은 데다, 법원이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절차에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만큼 권력의 무게추는 손 대표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양상이다.

손 대표 사퇴를 경선 공약으로 내걸고 원내사령탑에 오른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에게 "용퇴를 거부하셨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호소한 것도 당대표 퇴진론의 동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손 대표가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갈등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손 대표의 권한도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 최고위원회 의장이자 당무위원회 의장인 당대표에게는 의사정리권(議事整理權)이 부여돼 있지만, 최고위 구성 비율만 해도 당권파와 퇴진파가 각각 4대 5로 양분돼 안건 상정이나 의결 등의 과정에서 손 대표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자리를 보전하고 바른정당계의 반발을 묵살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혁신위원회 체제 출범이 거론된다.

혁신위가 가동된다면 손 대표가 당대표의 전권을 혁신위원장에 넘겨주고 본인은 2선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혁신위 체제로 우선 당 내 갈등을 정리하고 내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손 대표가 최대한 중립적인 외부 인사에게 혁신위를 맡길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혁신위는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도 손 대표가 꺼낸 카드로, 5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바 있으나 당 내에서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소멸된 바 있다.

바른정당계에서 손 대표 퇴진론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만큼 손 대표가 주장하는 혁신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바른정당계에서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불안정한 비상체제로 가기보다는 전당대회를 치러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당 전체가 일신하자는 쪽에 가깝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손 대표가 생각한다는 혁신위는 2선 후퇴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본인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바른정당계에서 혁신위를 인정할지 말지는 손 대표의 퇴진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황교안 "시민들은 살려 달라 절규…오늘 대한민국 자화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투쟁대장정'을 마무리하며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 시민들께서는 '살려 달라'고 절규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평했다.

황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직 국정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있고 패스트트랙에 있다"고 했다. 이어 "왜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보지 않냐"며 "국민의 삶과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민생투쟁대장정'을 통해 "힘이 없어도 꿈을 위해 계속 전진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알았다"며 "여러분의 꿈을 담아 미래성장 전략과 민생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치맥 미팅'을 마지막 일정으로 18일간의 일정을 종료했다.

민주당 "강효상, 제명해야"…한국당 "정청래는?"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중단, 제명·출당 조치해야"
한국당 "정청래도 받아본 내용, 야당의원만 문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기밀 유출' 논란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출당 등 당 차원 조치는 물론 의원직 제명까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과 국익 훼손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감과 응당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국민 알권리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강 의원을 감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통화 유출건이 '당파적 이익'이란 '소탐'에 집착하다 '한미관계 신뢰 위기'란 '대실'을 불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희경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자랑했으며 당시 통화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자당의 전 의원까지 받아보고 방송에서 만담용으로 떠드는 내용을 현 야당의원이 알고 기자회견하는 것만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성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사정한 정황이 공개됐을 때 청와대 반응은 '사실 무근'이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어떻게 삽시간에 기밀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라며 "안보상황도, 경제상황도, 동맹관계도 모두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차원의 두터운 거짓말의 장벽을 뚫고 처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야당의원의 책무다"라며 "정권이 온전히 제 할 일을 다하고 국민 앞에 사실을 말해야 야당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일갈했다.